

■ 화제의 뉴스 ■

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, 정책실명제 도입

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'개발사업 정책실명제'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.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 당국자의 실명과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.

대상 사업은 국토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,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(택지, 산단개발) 등입니다.

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,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, 보도자료, 예비타당성 조사결과, 위원회 심의내용, 공청회 및 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될 예정입니다.

정책실명제는 행정절차적 관점에서 정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, 정책담당자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정책실명제를 통하여 공개된 정책당국자의 법률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[파이낸셜뉴스 - 500억 이상 개발에 정책실명제 도입\(2013. 12. 30.\)](#)
- [건설경제신문 - 내년부터 대규모개발, 정책실명제 도입\(2013. 12. 30.\)](#)